

의장 보고

2012년 제3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담에서는 작년 회합에서 호평을 받은 테마별 그룹 토의를 한층 발전시켜 지방정부 공통 과제로서 회원 지방정부의 설문조사를 거쳐 사무국인 나라현이 선정한 4개 테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지역진흥’, ‘인재육성’에 관한 그룹 토의를 실시했다. 회원 지방정부가 미리 토의에 참가할 테마를 선택한 후 테마별 행정 과제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벌였다.

먼저 올해 8/29, 9/11 일에 열린 실무자 레벨 회합에서 2 테마씩 논의했다. 강사 기조강연과 회원 지방정부의 시책 보고를 기본으로, 강사 평가를 섞으면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 매우 활발한 논의 속에 각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행정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테마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추출했다.

오늘 전체 회합에서는 먼저 (재)지방자치연구기구회장, 전 내각관방부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씨가 ‘동아시아 정세와 지방정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시하라 씨는 본 회합에서 채택한 4개 테마가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 성장률 저하 등 동아시아의 사회 정세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인식 아래 그에 대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서로 논의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행정과제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책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가 심화되어 때때로 야기되는 중앙정부 레벨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중요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에 각 테마의 모더레이터로부터 실무자 레벨 회합의 토의결과 보고가 있었다. 오후에는 오전 기조강연과 실무자 레벨 회합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수장 클래스가 각 행정 과제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 논의를 더욱 심화했다.

아래와 같이 테마별 논의 결과(개요)를 크게 2가지로 정리·보고

I 지방정부의 구체적 시책(베스트 프랙티스)

II 향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운용면, 제도면)

테마별로 논의에 대한 집약 방법이 약간 다르다. 그 이유는 실제 예를 열거하는 것이 알기 쉽다고 생각되는 테마와 어느 정도 집약 정리하는 것이 공통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테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논의에 따라 실무상 참조하기 쉬운 방법으로 논점을 정리했다.

아울러 본 의장 보고는 의장인 나라현지사와 사무국인 나라현이 집약한 것이나 정리하는 데 있어 테마별 그룹·디스커션 각 강사와 모더레이터 분들의 정확한 지도와 편달을 받았다.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테마 1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I 지방정부의 구체적 시책

1. 고령자 지원

(1)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 고령자가 정든 자택에서 각종 개호·의료,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나라현)
- 구급의료 키트 배포, 요원호자 대장 정비와 지도정보 시스템화(시모이치초)

(2) 개호서비스 체계 정비

- 개호서비스 시설 건설의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복리성·비영리성 개호서비스 기구에 각종 보조금과 장려금을 교부(장쭈성)

(3) 커뮤니티 버스를 통한 고령자 외출 지원, 청년에 의한 장보기(쇼핑) 지원

- 쇼핑센터가 운행하는 커뮤니티 버스에 시가 보조금을 거출, 현지 청년 NPO의 고령자 장보기(쇼핑) 대행 사업을 보조(다자이후시)

2. 육아 지원

(1) 안심하고 출산·육아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이른 아침·연장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충실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아동 클럽의 정비·운영 등→어린이 정보지에서 ‘육아하기 좋은 마을 1위’ 평가를 획득(니가타시)

(2) 모자 보건 사업과 육아 지원 사업을 충실화

- ‘안녕하세요 아기 방문 사업(유아 가정 방문)’ ‘만남의 광장(육아 상담, 출장 보육 등)’, ‘모자의 정을 심화하는 프로젝트’ 등을 실시(텐리시)

(3) 좋은 육아 환경 만들기·지원책 충실

- 일반 불임 치료비와 불육 치료비의 일부를 조성, 법정외 접종 비용을 일부 조성, 국가 기준을 웃도는 소인원수 학급 실시 등(이카루가초)

(4) 출산 장려금 급부로 출생률 향상

- 출생률에 수치화 목표를 설정, 출산 장려금을 통한 보편적인 출산 지원으로 출생률이 향상, 육아 지원과 현지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에 기여(서산시)

3. 의료 충실화

(1) 의사, 간호사 등 평생 서포트 프로그램

- 의사·간호사의 커리어 향상을 평생에 걸쳐 지원하는 ‘평생 서포트 프로그램’을 제시(야마가타현)

(2) 건강·의료 산업을 창출·육성

- 당뇨병 극복을 테마로 산학관이 일체가 된 시책(도쿠시마 건강·의료 클러스터 구상에 따른 세계 수준의 ‘당뇨병 연구개발 임상 거점’을 형성).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 당뇨병 의료관광 사업화 등(도쿠시마현)

II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제도·운용

1. 사회보장 서비스의 지방 역할 강화

고령자 세대에 대한 현금 급부 중심의 보장에서 현역 세대를 포함한 서비스 급부 중심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를 더욱 깊게 검토해야 함(서비스 급부는 지방정부가 보다 많은 책임을 담당)

2. 사회보장 서비스의 포괄적 제공

국가의 법제도는 종적 관계, 지역에서 국가의 법제도를 횡적 관계로 바꾸고 포괄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구조를 법제화해야 함

3. 사회보장 서비스를 활용한 지역 경제 발전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지역의 고용·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테마 2 ‘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I 지방정부의 구체적 시책

1. 징세 효율화

(1) 지자체 간 제휴

- 현 직원의 시읍면 파견, 징수 공동 기구 설치,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특별징수 실시확인서 등의 의무 부여 등을 실시
→지자체 간 문제의식을 공유해 ‘규모의 경제’를 살린 징세 체제를 구축해야 함

(2) IT 기술 활용

- 전자 신고 시스템, 인터넷 공매 실시
- 한국과 일본의 세제는 매우 비슷하나 현과 시읍면에서 법인·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이 있을 때는 법인·개인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 효과가 높지만 체납은 원래 1.8% 정도
→세무 행정 효율화, 납세자 편의 향상을 도모
→행정조직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
→IT 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철저

(3) 인재육성

- 세무 전문직 육성, 인사 교류를 통한 육성, 퇴직 직원 활용 등을 실시
-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직원의 징수능력 향상이 불가결하나, 지금의 과제로서 징수직원 부족(소규모 단체일수록 현저), 징수 노하우의 계승을 들 수 있다.
→제도와 체제를 활용하기 위한 인재육성이 필요. 또 단체 간에 전문가를 초청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2. 체납 방지의 중요성

(1) 체납 미연 방지

- 기한 내 납부 홍보, 납세증명서 첨부, 특별징수 권장, 다양한 납세 수단 확보 등을 실시

(2) 체납 정리 시책

- 대규모·악질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적확한 처분과 형사고발도 시야에 넣고 대응
- 발생 직후의 체납 사안이나 건수가 많은 소액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 전화 최고(催告) 시스템(콜센터)의 활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

3. 납세 의식 향상

- 라디오·TV, 인터넷 홍보
- 납세는 애국심의 발로라는 의식 양성이 중요(부동산세 체납자 해소 프로젝트)
- RATE(Run After Tax Evaders) 캠페인
- 의무 교육을 중심으로 조세 교육을 실시
→수익에 응한 비용을 주민 스스로 부담한다는 의식을 고취해야 함

→행정에 필요한 의식 개혁으로서 세금 용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나, 주민측 시점에 선 정중한 대응, 조세교육 강화가 필요

4. 세수 확보

- 국내외 기업이 투자하기 쉽도록 법인세와 토지 사용세의 감면을 통해 세수 확보에 기여

II 바람직한 지방세 제도(사토 교수 기초강연에서)

1. 일본 지방세의 특징

다양한 세목, 법인 과세 의존, 세수 불안정, 지역간 격차, 법인 과세에 치우친 과세 자주권

2. 지방세제의 과제

- (1) 경제에 좋지 않은 세제
 - 높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세 체계
- (2) 과세 자주권의 실태
 - 법인에 치우친 초과 과세(조세 수출)
 - 기업 우대 세제(조세 경쟁)
 - 법정외세 신설

3.분권 시대의 지방세제

→지방세의 원칙은 ‘응익부담(応益負担)’

- (1) 세수 안정화·지역간 격차 시정
 - 법인 2 세의 의존도 인하
 - 지방이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
- (2) 주민에 대한 비용 의식 환기
 - 과세 기준 확대(개인에 대한 초과 과세)
- (3) 글로벌화 대응
 - 법인 과세의 실효 세율 인하

테마 3 ‘지역진흥’

I 지역진흥을 위한 구체적 시책

1. 관광 진흥을 위한 교통 대책

- 도로를 콘크리트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을 실현.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발레르시)
- 관광객의 주유(周遊)를 촉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정비 등의 하드 대책과 지역 정보 발신 등의 소프트 대책이 중요(시마네현)
- 파크 앤드 라이드, 순환 버스 도입(나라 공원·헤이조큐세키(나라현))
- 지구 내를 통과하는 교통을 배제하기 위한 우회도로 정비와 셔틀 버스·주유 버스를 운행(이와미 은광(시마네현)), 주차장 배제(시라카와고(기후현))
-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 요금을 높게 설정(말라카주)
- 노토 철도 폐선의 실패를 토대로 노토 공항의 진흥에 주력. 탑승률 달성을 위해 항공사와 협력금 제도를 도입, 지방공항 네트워크 정비를 위한 환승 할인 제도를 도입 등(노토 공항(이시카와현))
- 재해 복구를 위해 12개 중점 프로젝트를 설정. 그중 도로 네트워크 구축이나 물류·관광을 지탱하는 공항, 항구 등의 복구와 기능 강화를 포함하여 검토 중(후쿠시마현)

2. 비 관광업으로부터의 협력

- 시 종합개발계획에 지역주민의 참가 촉진을 규정. 관광객의 도선(導線) 등을 마을과 함께 조사. 관광 투자 환경을 창조(감세, 면세, 토지이용 규제 등)
→관광 관련 기업이 대폭 증가, 고용 창출(발레르시)
-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으로 유지 가능한 관광 자원이 많음. 양호한 관계 구축을 위해 지역에 고등교육과 종교 프로그램을 제공(말라카주)
- (다도해의 특징을 살려) 각 섬의 고유 브랜드를 명소화하기 위해 갯벌 체험 등 관광객과 현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광 상품을 기획·운영(전라남도)
- 시민과 협동하여 무전주화 사업과 경관계획 사업 등 역사적 풍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다가조시)
→지역 전체의 바람직한 모습을 행정과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일이 중요

3. 지역 아이덴티티·문화 활용

- 식재료를 활용한 덮밥 개발. 전국 향토 덮밥을 모아 ‘전국 덮밥 서밋’을 개최. 과장이 ‘게 왕자’로 변장하여 선전
→공항이 지역에 정착. ‘게 왕자’ 선전 효과도 있었다(이시카와현)
- ‘기후 보물’ 인정 프로그램 도입 등 지역의 자랑거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기후현)
- 고지키 편찬 1,3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관광자원을 브랜딩. 연고 있는 각 현과 제휴(시마네현).
- ‘해녀’ ‘닌자’ 등의 콘텐츠 활용. 신앙과 관광 진흥과의 조화를 도모(미에현)

- 지리적으로 연결된 와카야마현, 미에현, 나라현의 제후(나라현). 3 현의 지리적 제후에 기대(시안시)
-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마을 만들기 기운이 고조. 비수기용 관광 상품을 새로 개발. 관광 자원을 발굴해 인력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지역에 새로운 경제 순환이 발생했다.(기후현)
→ 전국 홍보·어필, 지역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과제

4. 지역 산업 활용

- 관광 산업뿐 아니라 첨단기술, 관광 기술 분야 산업도 중요. 따라서 도로·공항 등의 인프라 정비를 비롯해 컨벤션 기능, 에너지, 질 높은 노동 인력 공급이 필요(말라카주)
- 전자정보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 자동차부품 산업 등의 4 대 산업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테크노파크를 축으로 한 산업 정책을 추진(충청남도)
- 제조업 이외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함. 의료복지 분야와 재생가능 에너지산업에 주목하고 있음(미에현)

5. 행정 기관의 역할 분담

- 재정 상황이 각 현, 시읍면의 역할 분담을 좌우하는 면이 있다. 또 도도부현과 시읍면의 규모를 고려한 마을 만들기가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후쿠이현)
- 현청 조직 개정으로 관광영업부를 창설. 모든 영업활동을 철저하게 전개. 구체적 효과로서 현립 공룡박물관 입장자 수가 25 만명에서 50 만명으로 증가(후쿠이현)
- 현 주도로 지역마다 계획을 만들고 있으나 향후는 현과 시읍면의 역할 분담이 중요(야마나시현)
- 기키만요(記紀万葉: 고지키, 니혼쇼키, 만요슈)를 테마로 한 전국 각지의 개별 시책을 서로 연계시켜야 함(시마네현)

II 향후의 지역진흥

- 지역 진흥의 기초로서 고속도로, 공항 등의 인프라가 중요
-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 양성을 위해서도 지역의 아이덴티티와 긍지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지역의 자연·문화 교육’이 중요
- 관광산업뿐 아니라 타 산업과의 제후를 통한 지역진흥이라는 관점도 필요
- 현과 시읍면 행정 기관의 역할 분담에 있어 각각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깊게 검토해야 한다.
- 기키만요라는 광역적 관광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복수 현의 제후를 통한 시책이 필요

테마 4 ‘인재육성’

I 구체적 시책

1. 지방정부의 향후 인재육성

(1) 일본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 ①지방정부마다 채용, ②같은 지방정부에서 근무, ③연공서열 승진, ④제너럴리스트로서 근무, ⑤큰 방에서 함께 근무, ⑥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시책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등의 특징이 있음
- 지방 분권 후는 수장 아래에서 ①지방정부를 경영할 수 있는 인재, ②각 분야를 경영할 수 있는 인재, ③글로벌(Global&Local) 인재, ④리더십과 코디네이트 능력을 지닌 인재, ⑤정부에 대해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가 필요
- 향후는 전략적·계획적 인재육성, 간부 승진에 필요한 조건과 계승해야 할 ‘경험’의 ‘가시화’, 대학에서 연구·면학 이외에 해외를 포함한 다른 조직에서의 경험 및 인맥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함
- 시읍면이 자주적으로 인재육성에 임할 수 있는 광역 연수기관으로서 ‘고치 인재양성 광역연합’을 설립(고치현)
- 직원이 커리어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능력개발에 주력. 조직으로서 그것을 지원하는 시책(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함과 동시에 직원을 육성하는 직장 환경을 만드는 ‘반(班) 제도’를 도입해 직책에 따른 역할을 ‘가시화’(시즈오카현)
- 직원 양성학원을 통해 자주적으로 지방자치법과 나라시 관광을 공부하는 그룹 등이 생겨났음(나라시)
- 직원 수 삭감에 따라 각 직원의 의식 개혁과 능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근무평정에 자학을 촉진하는 자기 평가를 도입하고 평정 결과를 피드백하는 면담을 도입. 직원의 자기실현과 관리직의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고료초)

(2) 중국의 지방정부 인재육성

- 공무원에 정부는 정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려고 하나 공부한 것이 그대로 직무에 활용되지는 않는다. 간부 육성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린이시)
- 기간산업에 관한 업무 능력과 실천 능력, 이론적인 면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육성(둥잉시)

(3) 한국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 도내 31개 시군 조직과 26개 공공기관을 대상. 각 도시의 특성과 직원의 요구를 반영. 경기도 전역을 공생 발전시키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효과적 공공기관 인재육성과 조직 문화 개선을 지원하는 교육 컨설팅 사업을 실시. 이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인재육성이 곤란한 소규모 지자체 인재도 효과적으로 육성 중(경기도)

(4) 베트남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 타 성과 도시와 협조하여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유능한 관민 인재육성을 실시. 또 해외 유학도 활용하면서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 확보에 주력 중(후에성)

2. 지역력 창조를 위한 인재육성

(1) 지역력 향상을 위한 시책

- 헤이조 천도 1,300 주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의식한 것은 관민 제휴. 이벤트는 계기·수단이며 지역 만들기는 실제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나라현)
- 자원봉사 학생들을 지역 주민이 따뜻하게 맞이한 것을 계기로 학생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특산물을 만드는 사례가 생겼다.(돗토리현)
- 향후는 아래와 같은 시책을 통해 새로운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1인당 생산액을 높여야 한다.
 - ① 지역의 특징을 살려 지역의 독자적 매력과 가치를 높이는 데 활약할 창조적 인재를 육성한다.
 - ② 창조적 인재가 모이는 환경을 정비한다.
 - ③ 부가가치가 높고 소비자가 공감하는 아트와 이야기 등을 창출한다.
 - ④ 지역 특산품의 품질을 높여 지역 브랜드를 확립한다.

(2) 공무원의 위치를 재검토

- 이문화·타 업종 사람들과 적극 교류하고 ICT를 활용해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시대로
- 현장에서 진지하게 실천 활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의 발상을 소중히 한다. 주민의 힘을 이끌어내고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연구가 필요

(3) 지역력 창조 인재육성의 과제

- 젊은 힘과 대학의 노하우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역학(域学) 제휴가 필요하다.
- 고령자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력 창조에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 인재육성 구조가 필요
- 퇴직 후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재직자 연수 등을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함(특히 공무원에 대해서)

II 향후 인재육성

- 중국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이 최우선 과제. 따라서 ‘인재육성’보다 경제발전을 위해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는 ‘인재 유치’가 초미의 과제
- 일본, 중국, 한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는 다르지만 과제 해결을 위해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일치

- 일본에서는 지방정부 직원 육성과 지역 인재육성이 중복되고 있다.(지방정부 직원으로 퇴직 후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 지방정부는 지역 인재의 보고, 지역 경영의 시점을 가지고 지역 전체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의식을 가진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능력과 지향을 지닌 인재와 조직의 목표를 적절히 결합한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견당사 시대부터 교류는 인재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창조적 인재는 이문화, 타 업종과의 교류 속에서 자라게 된다. ‘과제 공동체’이기도 한 동아시아의 인재육성을 위해 교류와 광역적 시책이 필요